

## 오늘의 세계경제



# 기후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문진영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장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이성희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leesh@kiep.go.kr, Tel: 044-414-1234)

김은미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전문연구원 (emkim@kiep.go.kr, Tel: 044-414-1037)



..... 차 례

#### y H

- 1. 배경
- 2. 기후정상회의 논의
- 3.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미국은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통해 상향된 감축목표, 개도국 지원 규모 등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였으나,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새로운 정책목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따라 40개국 정상,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공유 등을 논의함.
  - 미국이 기후변화 관련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나, 차후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이러한 정책기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정책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됨.
- ▶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제인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기 후재원 조성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는 파리기후협정하에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조치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조치와 기후행동이 요구됨.
-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2012년 3,600억 달러에서 2019년 6,080억~6,220억 달러로 크게 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적정 투자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바 선진국-개도국, 공공-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
- 비용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는 감축에 대한 실질적 기여와 국제 무역질서 위배 여부 등을 놓고 쟁점으로 부상함.
-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의제 논의를 주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실현가능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추진] 탄소중립을 국가 장기 비전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면서 감축 경로와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취약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저탄소 전환 지원이 필요함.
- [기후재원 조성 및 민간 지원 기후재원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GCF 시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K-Taxonomy,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등)이 원만히 시행·정착되도록 기업과의 소통 강화, 중소기업 지원,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탄소가격제 국제협력]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관련 이니셔티 브에 적극 참여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미 협력 강화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협력을 강화하면서, 양국간 관심이 높은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시업 부문에서 협력하고, 미국의 공공 및 민간 기금이 국내 그런뉴딜 시업에 투자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1. 배경

-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는 기존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대체하는 신기후체제로서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을 도출하면서,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1.5℃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COP21의 요청에 따라 발표한 보고서¹)에서는 지구 평 균온도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넷제로(net-zero)'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음.²)
- 2019년 12월 EU에서 2050년까지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Europen Green Deal)을 발표하고, 2020년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었음.
- 2019년 12월 EU의 유럽 그린딜 발표 이후 2020년 주요국이 연이어 탄소중립을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 를 포함한 약 20개국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100여 개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있음.3)
- 2020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기존에 제출한 기여방안(NDC)을 갱신하였으며,4) 우리나라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2030년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2025년 이전에 추가적인 감축목표 상향계획을 명시함.5)
-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며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청한 기후정상회의 (Leaders Summit on Climate)를 지난 4월 22일 화상으로 개최하며 주목을 받고 있음.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제고를 모색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이번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sup>1)</sup> IPCC(2018),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sup>2) &#</sup>x27;넷제로(net-zero)' 또는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 중 온실가스 제거량으로 상쇄하여 순배출량이 제로(0)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함.

<sup>3)</sup> Net zero tracker, https://eciu.net/netzerotracker(검색일: 2021. 5. 3).

<sup>4)</sup>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감안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임.

<sup>5)</sup> 외교부 보도자료(2020. 12. 31), 「우리나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 제출」.



-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20년 7월)과 2050년 탄소중립 선언('20년 10월)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데, 기후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2. 기후정상회의 논의6)

- [개최 배경]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석연료 성향의 정책을 비판하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였고, 취임 100일 이내에 기후변화 관련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함.
-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의 탐사, 개발 및 활용을 지지하며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state)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음.
- 2020년 7월, 당시 민주당 바이든 대선후보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통해 2조 달러를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효율, 전기차 등에 투자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zero)'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취임 100일 이내에 주요 배출국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함.7)
-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파리협정 재가입을 선언하고 전임 행정부에서 완화한 화석연료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를 초청함.
- 파리협정은 전 세계 191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협약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협정 체결을 주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에 탈퇴를 신청하고 2020년에 공식 탈퇴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재가입을 선언함.8)
-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에서 기후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할 것임을 강조하며 기존 정부에서 허가한 화석연료 관련 정책을 취소 또는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함.
- 키스톤(Keystone) XL 파이프라인 건설 허가 취소,¹0) 석유와 가스 사업에 대한 공유지 임대 재검토 및 완료 시까지 신규 임대 금지, 연방정부 차원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 등
- 또한 2015년 파리협정에 서명한 바 있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현정부 대통령 기후특사로 임명하였으며, 회의 개최 이전에 특사를 인도, 중국 등지로 파견하여 기후변화 관련 협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sup>6)</sup> 기후정상회의 관련 내용은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leaders-summit-on-climate/(검색일: 2021. 4. 26)에 공개된 회의 영상자료 및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참고한 언론 기사는 별도 각주로 표기함.

<sup>7)</sup> https://joebiden.com/clean-energy/(검색일: 2021. 4. 22).

<sup>8)</sup>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XXVII-7-d&chapter=27&clang=\_en#4(검색일: 2021. 4. 23).

<sup>9)</sup>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EO 13990),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EO 14008) 5.

<sup>10)</sup> 미국과 캐나다 간 원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추가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승인을 거부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승인한 바 있음. 문진영, 김은미(2017),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과 시사점」, Vol. 17 No. 3, p. 10, 재인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회의 개요] 2021년 4월 22~23일 양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는 40개국의 정상급 인사와 구테흐스 UN사무총장, 프란치스코 교황,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CEO 등이 참석하였으며, 총 5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됨(표 1 참고).
- '지구의 날(Earth day)'인 4월 22일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는 미 해리스 부통령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뒤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함.
- 각 세션에는 각국 정상 또는 관계부처 장관, 국제기구 관계자,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온실가스 감축목 표부터 기후재원,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 기후행동, 기후혁신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구성됨.

일자	구분	주요 의제	
	세션 1	기후변화 대응목표 상향	
	세션 2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투자	
4. 22. (1일 차)	세션 3*	적응 및 회복력	
		모든 수준(도시, 지역, 원주민 사회 등)에서의 기후행동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경제 및 국가적 안보 위협	
		기후 회복력을 위한 해결책(벌목 축소 등)	
4. 23.	세션 4	기후혁신 추구	
(2일 차)	세션 5	기후행동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기회	

표 1. 기후정상회의 세션별 주요 의제

주: \* 세션 3의 경우 주로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2개의 라운드테이블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각 라운드테이블은 2개의 테마로 진행됨. 자료: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leaders-summit-on-climate/schedule/(검색일: 2021. 4. 23).

- 특히 세션 1('Raising Our Climate Ambition')에는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였으며, 영국, 독일 등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sup>11)</sup>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회의 전날에서야 참석을 확정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UN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사업 참여'를 촉구함.
- 영국의 <del>존슨</del> 총리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미국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양일간의 회의 결과는 ①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발표 ②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③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자협력 추진 ④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공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sup>11)</sup> 미국은 러시아의 2020년 미 대선 개입과 연방기관 해킹을 이유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고,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AP News(2021. 4. 16), "US expels Russian diplomats, imposes sanctions for hacking," https://apnews.com/article/us-expel-russia-diplomats-sanctions-6a8a54c7932ee8cbe51b0ce505121995(검색일: 2021. 4. 26).



- [① 상향된 국가 감축목표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미국을 필두로 EU, 일본, 캐나다 등이 기존 대비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함(표 2 참고).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는 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2025년까지의 감축목표(26~28% 감축)보다 2배 정도 상향한 것임.
-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 UN총회에서 제시했던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정점을 지나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재언급하며, 석탄발전과 제14차 5개년 규획기간(2021~25년) 내 석탄 소비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제15차 5개년 규획기간(2026~30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함.
- [EU] 회의 개최 전날인 21일에 EU 집행위와 유럽 의회가 합의한 「기후법(Climate Law)」을 통해 2030 년까지의 감축목표(1990년 대비 55% 감축)가 확정되었는데, 이는 2020년에 발표한 40% 감축보다 상향된 목표를 법제화한 것임.
- [일본] 스가 총리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26%에서 46%로 상향할 것"임을 발표하였으며, 4월 16일에 개최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을 언급함.
-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말 제출한 감축목표보다 상향된 목표를 2021년 말까지 UN에 제출할 것'이며,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국가		기존 목표	기후정상회의 발표 내용	
미국		·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중국	*)	<ul> <li>2030년까지 원단위(배출량/GDP) 기준</li> <li>2005년 대비 60~65% 감축</li> <li>2030년까지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및</li> <li>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2020년 발표)</li> </ul>	· 2020년 발표 목표 재확인	
EU	$\bigcirc$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일본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한국		·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	· 감축목표 상향 후 연말까지 제출	
캐나다	*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0%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45% 감축	

표 2. 주요국의 기존 감축목표 및 기후정상회의 발표 내용 비교

- 주: 좌측 '기존 목표'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2016년 제출, 캐나다는 2017년 제출, EU, 일본 및 한국은 기존 목표를 2020년에 업데이트하여 제출한 국가결정기여(NDC)를 기준으로 정리.
- 자료: UNFCCC NDC Registry, https://www.unfccc.int/sites/ndcstaging/Pages/Home.aspx;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leaders-summit-on-climate/(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4. 26).
- [② 기후재원 및 개도국 지원 확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개도국을 위한 공적자금 지원과 민간투자 촉진계획을 발표함(표 3 참고).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선진국의 지원공약을 신뢰할 수 있어야 개도국이 동일한 감축 노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환경예산을 늘리고 2030년까지 불법 벌채를 종식할 계획'이라며 미국 측에 '아마존 산림 보호를 위해 1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청함.12)



- 미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한 미국의 '국제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에 포함된 개도국 재정 지원 규모(202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2기 평균 대비 공공기후기금 2배 확대, 기후 적응 지원 규모 3배 확대 등)를 발표함.
- 기후정상회의 및 국제기후금융계획을 통해 밝힌 개도국 대상 재정 지원은 57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추산<sup>13)</sup>
- 그 외 참석자들은 민간재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영역과 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양허성(concessional) 자금 지원을 강조하였고, 탄소가격제, 기후위험에 관한 정보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함.

표 3. 미국의 국제기후금융계획(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연번	목표	주요 계획
1	기후재원 지원 규모 및 영향력 확대	<ul> <li>개도국 지원 규모 확대</li> <li>2024년까지 오바마 행정부 2기(FY 2013~16년) 평균 대비 공공기후기금 2배 확대, 기후 적응 지원 규모 3배 확대</li> <li>기관별 지원방안</li> <li>국제개발처(USAID): UNFCCC 당사국총회(COP26)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계획 발표</li> <li>국제개발금융공사(DFC): 개발전략에 최초로 기후 이슈를 포함하여 수립 감축 및 적응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li> <li>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향후 5년간 자금의 50%를 기후 연관 투자로 사용</li> <li>재무부: 다자개발은행(MDBs) 내 미국 중역(executive directors)에게 해당 기관이 상향된 기후재원 목표와 정책을 수립·적용하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 등</li> </ul>
2	민간재원 동원	· 기관별 지원방안 -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민간과의 파트너십 및 혼합금융 활용 확대 - 국제개발금융공사(DFC): 2023년부터 기후 중점 신규투자 비중이 1/3을 넘도록 확대 - 수출입은행: 친환경 수출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3	화석연료 기반시업 대상 투자 및 지원 중단	· 화석연료 기반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국제적 투자 및 지원 중단 · OECD와 협업하여 공적수출신용기관이 제공하는 수출금융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등
4	기타	·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로와 자금 흐름을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지원 노력 추진 · 국제기후재원의 정의·측정·보고 체계 마련 등

자료: 미 백악관 보도자료(2021. 4. 22), "EXECUTIVE SUMMARY: U.S. International Climate Finance Plan"; 미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leaders-summit-on-climate/(검색일: 2021. 4. 26)를 토대로 저자 정리.

- [③ 저탄소 기술 혁신 및 다지협력 추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 혁신과 관련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랍에미리트는 7개국과 협력하여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미션(Agriculture Innovation Mission for Climate)'을 수행할 계획임을 발표함.
- IEA 관계자는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의 45%는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에 비롯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빌 게이츠는 '투자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넷제로 연관기술에 대한 녹색 프리미엄(green premium)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sup>12)</sup> 그러나 브라질은 회의 종료 다음 날(24일) 환경부와 감독기관의 예산을 전년대비 24% 삭감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Reuters(2021. 4. 24), "Brazil cuts environment spending one day after U.S. climate summit pledge," https://www.reuters.com/business/environment/brazil-cut s-environment-spending-one-day-after-us-climate-summit-pledge-2021-04-23/(검색일: 2021. 4. 26).

<sup>13)</sup> Bloomberg(2021. 4. 23), "Biden Disappoints Activists With \$5.7 Billion Climate Pledge for Poor Countri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22/biden-s-5-7-billion-climate-vow-to-developing-world-draws-ire(검색일: 2021. 4. 27).



-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호주, 브라질, 덴마크, 이스라엘, 싱가포르 및 우루과이와 협력하여 '기후를 위한 농업 혁신 미션'을 시작하였으며, GE Renewables 등 민간기업은 혁신인재 교육과 디지털화, 전기화, 탈탄소화 및 탄력적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기술 투자를 강조함.
- [④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 공유]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공유하였고, 미국은 기후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함.
- 기후변화가 어떻게 안보 문제를 심화시키는지와 그 결과가 군사력, 지정학적 경쟁, 안정성, 지역 갈등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상 이변(해수면 상승 등)의 심각성을 공유함.
- 미국은 기후행동이 금세기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은 노동조합이 화석연료 관련 근로자의 공정 전환과 고용 기회를 촉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함.

## 3.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 가. 감축목표 상향과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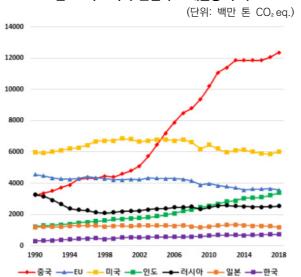
- 국제사회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조치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와 기후행동이 요구됨.
- 2000년대 들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지속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LUCF<sup>14)</sup> 제외)은 약 460억 톤 CO₂eq.으로 중국, 미국, EU, 인도 등이 고배출 국가이며, 분야별로는 에너지 부문의 배출 비중이 높음.
- 과거 배출량 상위국이던 미국과 EU의 배출량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2000년대 들어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인도 역시 배출량이 늘고 있음(그림 1 참고).
- 중국은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이 되었는데, 13억의 인구, 높은 석탄의존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2018년 기준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의 배출량이 전체의 78% 수준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농업, 산업 공정, 폐기물 순으로 나타남(그림 2 참고).
- 2020년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 에너지 수요와 탄소배출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기는 했으나, 올해는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배출량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당사국들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NDC)를 전부 이행한다 해도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목표 달성에 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바, 각국은 강화된 감축목표와 기후행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sup>14)</sup> LUCF(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



- 2020년 말까지 UN기후협약(UNFCCC)에 75개국이 제출한 NDC를 분석15)한 결과, 이들의 감축목표치를 합 산하면 2030년 배출량은 136억 7,000톤으로 2010년 대비 0.5%, 2017년 대비 2.1% 감축하는 수준에 그쳐, 2018년 IPCC 보고서에 제시된 목표(2030년까지 2010년 대비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를 크게 하회함.
- EU. 영국, 칠레, 노르웨이 등은 기존보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한 반면 한국,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브라 질, 호주 등은 기존 감축목표치를 그대로 제출하였음.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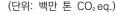
그림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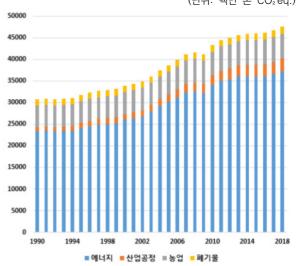


주: World Resource Institute의 CAIT 데이터 기준이며,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벙커연료와 LUCF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Climate Watch, Global historical emissions, https://w ww.climatewatchdata.org/ghg-emissions(검색일: 2021. 4. 23)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2.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주: World Resource Institute의 CAIT 데이터 기준이며,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벙커연료와 LUCF를 제외한 수치임.
- 자료: Climate Watch, Global historical emissions, https://w ww.climatewatchdata.org/ghg-emissions(검색일: 2021. 4. 23) 토대로 저자 작성.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보다 획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탄소중립 목표를 연이어 발표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17)
-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이미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였으며(표 4 참고), EU, 캐나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2040~50년 사이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국가 정상이 선언하거나 정책문서에 명시함.18)
- 글로벌 기업들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량을 제거하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음.19)

<sup>15)</sup> 다만 이는 2020년 말까지 제출된 NDC에 대한 분석으로, 파리협정 전체 당사국의 40%에 불과함. 2021년 말 COP26 개최 전까지 당사국들의 추가적인 NDC 제출이나 갱신이 예상됨. 자세한 분석내용은 UNFCCC(2021),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Synthesis report by the secretariat.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cma2021\_02E.pdf(검색일: 2021. 4. 23) 참고.

<sup>16)</sup> Carbon Brief(2021), Analysis: Which countries met the UN's 2020 deadline to raise 'climate ambition'? https://www.carbonbrief.org /analysis-which-countries-met-the-uns-2020-deadline-to-raise-climate-ambition(검색일: 2021. 4. 24).

<sup>17)</sup> 이하의 내용 중 일부는 발간 예정인 KIEP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장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sup>18)</sup> Net zero tracker, https://eciu.net/netzerotracker(검색일: 2021. 4. 23).

<sup>19)</sup> 예를 들어 구글은 2007년 탄소중립을 달성한 데 이어 2020년 9월에는 창립 이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모든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밝혔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창립 이래 배출한 탄소량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2018년 발표된 IPCC 보고서는 2050년까지 '글로벌 차원'의 넷제로 목표를 강조한 바 있으며, 최근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고무적인 추세임.
- 목표 시기까지 넷제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탄소중립의 비전이 해당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고배출 국가들은 넷제로가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가	범위	분야	탄소중립 목표연도	국제 항공/ <del>운송</del> 포함 여부	탄소중립 목표의 법적 지위
EU	All GHGs	전 분야	2050	언급없음	장기전략, <sup>1)</sup> 유럽 그린딜 <sup>2)</sup>
영국	All GHGs	전 분야	2050	포함	기후변화법
일본	All GHGs	전 분야	21세기 후반 <sup>3)</sup>	언급 없음	장기전략
덴마크	All GHGs	전 분야	2050	미포함	기후법
프랑스	All GHGs	전 분야	2050	미포함	에너지기후법
스웨덴	All GHGs	전 분야	2045	미포함	기후법
싱가포르	All GHGs	전 분야	21세기 후반	미포함	장기전략

표 4.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 비교

- 2) EU는 기후법 개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할 예정.
- 3) 일본은 LEDS상에서는 21세기 후반 탄소중립을 명시했으나, 2020년 스가 총리가 2050년으로 달성 시점을 선언하였고 같은 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을 발표.
- 4) 미국과 중국은 국가 정상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으나, 장기전략이나 구체적인 정책문서로는 발표되지 않아 위의 표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World Resource Institute, 7 Ways to Spot Robust Net-Zero National Commitments, https://www.wri.org/insights/7-way s-spot-robust-net-zero-national-commitments(검색일: 2021. 4. 23).

## 나. 기후재원

- UN기후변화협약 채택 이래 개도국은 선진국의 기후재원 지원을 강조해왔는데, 기후재원은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2년 채택된 UN기후변화협약은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였으며,<sup>20)</sup>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선진국이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대안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음.
- 또한 COP16은 기후변화에 특화된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하여 UN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재정 메커 니즘의 운영주체로 기능하도록 결정하였음.
- 기후재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보고체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선진국이 약속한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는 2015년 파리협정 논의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며, 파리협정에서는

주: 1) 장기전략은 당사국이 제출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을 의미.

<sup>20)</sup> UN기후변화협약 제4조(Commitments) 3항은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 의무가 있는 선진국을 부속서II 국가군으로 편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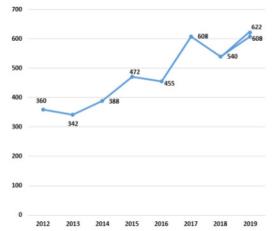


2025년까지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수량화된 목표(a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설정하도록 합의하였음.

-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는 2012년 3,600억 달러에서 2019년 6,080억~6,22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으나(그림 3 참고), 지구온난화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16~50년 1조 6,000억~3조 8,000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재원조성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요구됨.<sup>21)</sup>
- 기후재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비중은 44:56(2017~18년 평균) 수준으로 민간의 기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기후재원의 90% 이상이 적응(adaptation)보다는 감축(mitigation) 목적으로 활용됨.
- 각국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전략에서 기후재원 조성목표와 조달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며, 온 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
- 저탄소 경제 및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해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기 후재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

그림 3. 글로벌 기후재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주: 2019년 전망치는 6.080억~6.220억 달러 범위임.

자료: CPI(2020), Updated view on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https://www.climatepolicy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20/12/Updated-View-on-the-2019-Global-Landscape-of-Climate-Finance-1.pdf(검색일: 2021. 4. 23).

표 5.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지원 규모 및 비중(2019)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감축	적응	공통	합계	(D)
4/1	(A)	(B)	(C)	금액	비중
일본	4,870.6	835.7	78.4	5,784.7	39.8
아슬만	3.4	8.0	4.1	15.6	30.3
영국	1,782.9	1,543.3	624.2	3950.4	29.8
벨기에	22.1	109.9	195.9	327.9	28.5
프랑스	1,658.9	588.6	403.9	2651.4	28.1
독일	2,678.3	1,592.0	1,333.5	5603.8	27.5
스웨덴	146.3	295.3	452.4	894.0	25.7
네달란드	45.6	433.4	326.5	805.5	23.4
화	0.0	5.9	509.8	515.6	23.0
한국	8.6	105.4	47.8	161.8	7.9
DAC 평균	433.3	244.2	211.3	888.9	20.0

- 주: 1) OECD의 정책 마커 가운데 기후변화 마커 기준으로 기후변화 합계(D)는 감축(A), 적응(B), 감축적응 공통(C)의 합으로 계산함.
  - 2) 각 국이 제공한 전체 양자 ODA 금액 대비 기후변화 마커 비중을 계산하여 상위국 위주로 정렬함.
-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https://s 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21. 4. 2) 토대로 저자 계산.

#### ■ OECD DAC 회원국 평균적으로 對개도국 양자 ODA의 20%를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제공함(2019년 기준).<sup>22)</sup>

<sup>21)</sup> CPI(2019),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https://www.climatepolicy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19/11/2019 -Global-Landscape-of-Climate-Finance.pdf; CPI(2020), Updated view on the global landscape of climate finance 2019, https://www.climatepolicyinitiative.org/wp-content/uploads/2020/12/Updated-View-on-the-2019-Global-Landscape-of-Climate-Finance-1.pdf(검색일: 2021. 4. 23).

<sup>22)</sup> OECD DAC의 정책 마커(policy marker) 중 리우마커의 하나인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에 대한 마커를 기준으로 對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규모를 계산함. 공여국은 개별 지원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이 사업의 주목적일 경우 2점, 부수적 목적일 경우 1점, 목표로 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부여함.



- OECD DAC 회원국 평균(2019년 기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8억 8,9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는 전체 양자지원 금액의 20.0% 수준이며, 상기 ODA는 각각 감축 48.8%(4억 3,330만 달러), 적응 27.5%(2억 4,420만 달러), 감축과 적응 공통 목적 23.8%(2억 1,130만 달러) 비중으로 구성됨(표 5 참고).
- 일본은 양자지원의 39.8%를 기후변화 대응 목적으로 제공하였고, 아이슬란드(30.3%), 영국(29.8%), 벨기에 (28.5%), 프랑스(28.1%) 등도 DAC 회원국 평균 지원 비중을 상회하여 지원함.
-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목적의 ODA는 전체 양자지원액의 7.9%에 불과하며, 감축보다는 적응이나 감축·적 응 공통 목적의 지원 비중이 높았음.
- 한편 국제사회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추세로,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도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지원 중단을 공식화함.
- 현재 전 세계 116개의 금융기관은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자발적 협약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참여하고 있으며,23) OECD는 2015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부 최빈국을 제외하고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기관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함.24)
- 그동안 개도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공적자금을 대거 투입한다는 이유로 국내외적인 비판<sup>25)</sup>을 받아온 우리나라와 일본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
- 국내 113개 금융기관은 올해 3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통해 고탄소 산업에서 탈탄소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에 적극 노력할 것을 밝힌바 있으며,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책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공적금융의 기후금융 활성화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임.
- 일본은 2020년 해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제한적 지원만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든 데 이어 올해 4월 미국과 의 정상회담과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석탄 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함.<sup>26)</sup>
- 향후 관련 업계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중심으로의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해 보이며, 정부는 이들 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제도 개편, 기술 개발 및 인력 재교육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는 기후재원 조성 과정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속가능한 투자'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EU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행동계획,27)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판별하는 분류체계(EU

<sup>23)</sup> Equator Principles, https://equator-principles.com/about/(검색일: 2021. 4. 26).

<sup>24)</sup> OECD, Statement from Participants to the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https://www.oecd.org/newsroom/st atement-from-participants-to-the-arrangement-on-officially-supported-export-credits.htm(검색일: 2021. 4. 26).

<sup>25)</sup>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매출의 30% 이상을 석탄발전으로 얻는다는 이유로 한국전력을 투자 금지기업으로 지정하였으며, 국내 정책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음.

<sup>26)</sup> Nikkei Asia(2021), "Japan looks to end support for overseas coal power projects" (March 29), https://asia.nikkei.com/Spotlight/Environment/Climate-Change/Japan-looks-to-end-support-for-overseas-coal-power-projects(검색일: 2021. 4. 28).



Taxonomy)를 법제화하였으며,<sup>28)</sup> 최근 6대 환경목표<sup>29)</sup> 중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선별조건(TSC)<sup>30)</sup> 수립,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SFDR)<sup>31)</sup> 등을 추진함.<sup>32)</sup>

- G20은 기후변화 관련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33)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재무정보를 공시할 것을 권고해왔으며,34) 전 세계 90개 중앙은행과 금융 감독기관도 녹색금융네트워크(NGFS)35)에 참여하며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감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36)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국제표준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자 새로 운 위원회(SSB) 창설을 구상하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37)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19개국은 글로벌기관투자자네트워크(ICGN)의 글로벌 스튜어드십 코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38)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업·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녹색채권 등을 통해 친환경 사업으로의 투자를 늘리고 있음(그림 4, 5 참고).
- BloombergNEF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상품 발행 규모가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7,32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녹색채권(3,053억 달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발표함.39)
- CBI에 의하면 2020년 녹색채권을 최대 규모로 발행한 기관은 비금융기업(22.3%)이었으며, 공공기관 (22.1%), 금융기관(19.2%), 중앙정부(11.8%), 개발은행(7.8%) 등의 순으로 많았음.<sup>40)</sup>
- MSCI가 최근 총 200명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73%가 2021 년 말까지 ESG 투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응답함.41)

<sup>27)</sup>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sup>28)</sup>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ncil(2020), "Regulation (EU) 2020/852 (Taxonomy)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sup>29)</sup>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예방 및 관리, 생물 다양성·생태계 보호 및 복원.

<sup>30)</sup>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sup>31)</sup>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up>32) 2021</sup>년 3월부터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SFDR)가 시행됨에 따라 역내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European Commission 보도자료(2021. 3. 1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mex\_21\_1106(검색일: 2021. 4. 29).

<sup>33)</sup>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sup>34)</sup> 문진영 외(2020),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8, p.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up>35)</sup>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sup>36) 2021</sup>년 4월 26일 기준. NGFS 홈페이지, https://www.ngfs.net/en/about-us/membership(검색일: 2021. 4. 29).

<sup>37)</sup> IFRS재단은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 on Sustainability Reporting)에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SSB: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역할을 설명하며 창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IFRS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1/03/trustees-announce-strategic-direction-based-on-feedback-to-sustainability-reporting-consultation/(검색일: 2021. 4. 29).

<sup>38)</sup> ICGN, "ICGN Annual Review June 2019-20," p. 15, https://www.icgn.org/information/annual-review(검색일: 2021. 4. 29). '스튜어드 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투자자가 투자 대상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비재무적 정보 공시 등을 요구하여 이를 투자에 반영하려는 제도인

<sup>39)</sup> BloombergNEF 홈페이지, https://about.bnef.com/blog/sustainable-debt-breaks-annual-record-despite-covid-19-challenges/(검색일: 2021. 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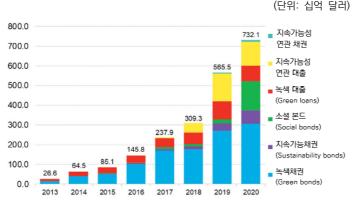
<sup>40)</sup> CBI Green Bond Data Platform, https://www.climatebonds.net/market/data/(검색일: 2021. 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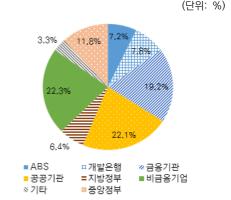
<sup>41)</sup> MSCI(2021), "MSCI Investment Insights 2020: Global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p. 6, p. 10.



#### 그림 4.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상품 발행 규모(2013~20년)







자료: BloombergNEF 홈페이지, https://about.bnef.com/blog/sustainable-debt-b 자료: CBI Green Bond Data Platform, https://www.cli reaks-annual-record-despite-covid-19-challenges/(검색일: 2021. 4. 29).

matebonds.net/market/data/(검색일: 2021. 4. 23).

#### 다. 탄소가격제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sup>42)</sup>는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주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상쇄 메커니즘, 결과기반 기후재원 등이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의 도입을 고려하는 지역 및 국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며, 탄소세(carbon tax)는 화석연료의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2020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6%가 국가나 지역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에 포 함됨(그림 6 참고).
- 현재 운영 중인 탄소세는 국가 단위 25건(일본, 싱가포르, 스웨덴, 멕시코 등), 국가 내 지역단위 (sub-national) 7건(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이며, ETS는 국가 단위 7건(한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국 가 내 지역 단위 20건(일본 도쿄, 미국 캘리포니아 등), 국가간 지역 단위(regional) 1건(EU) 실시되고 있음.
- 톤당 탄소가격은 국가나 지역별로 실시되는 탄소가격제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으로, 예를 들어 스 웨덴 탄소세는 톤당 133달러, 칠레의 탄소세는 톤당 5달러, EU의 ETS는 톤당 30달러, 우리나라 ETS는 톤당 18달러로 나타남(그림 7 참고).43)
- 탄소가격에 대한 고위급위원회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톤당 탄소가격이 2030년까지 50~1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으며, IEA 역시 파리협정을 고려 한 이상적인 탄소가격으로 돈당 75~100달러 범위를 제시한 바 있음.44)

<sup>42)</sup>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What is Carbon Pricing?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what-carbon-pr icing(검색일: 2021. 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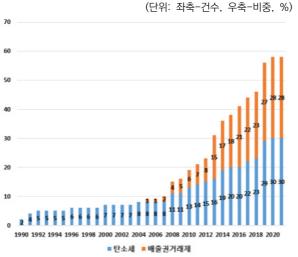
<sup>43)</sup>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의 톤당 탄소가격은 각 제도의 설계, 즉 대상분야(산업군, 연료), 할당방식, 예외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sup>44)</sup> World Bank(2020), State and trends of caron pricing 2020,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3809/ 9781464815867.pdf?sequence=4&isAllowed=y(검색일: 2021. 4. 28).



-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제출한 NDC의 2/3에서 탄소가격제 활용이 언급되었고,<sup>45)</sup> 터키, 브라질, 우크라이 나, 태국 등도 탄소세나 ETS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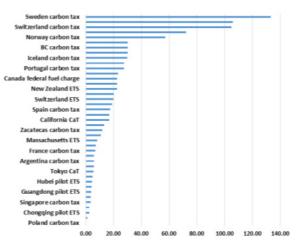


주: 1) 2020년 11월 기준, 2) 좌축(막대그래프)은 해당 연도에 운영되고 있는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건수이며 우축(꺾은선 그래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운영 중인 탄소가격제에 포함되는 배출량의 비중임.

자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검색일: 2021. 4. 27).

#### 그림 7. 탄소가격제도의 탄소가격 비교





지료: World Bank, Carbon pricing dashboard, https://carbonpricingdashboard.worldbank.org/map\_data(검색일: 2021. 4. 27).

- EU는 2005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 EU는 세계 최초로 ETS를 도입하여 현재 4기(2021~30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그린딜과 강화된 감축행동의 일환으로 탄소누출 방지조치, 시장안정화예비분(MSR) 확대, ETS 대상 산업군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ETS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ETS 3차 계획기간(2021~25년) 내에 유상할당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임.
- 일본은 그동안 화석연료에 대한 '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 단위에서 ETS를 실시하였으나, 최 근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ETS 전면 도입 계획을 밝힘.46)
- 2011년부터 8개 성시(省市)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ETS를 운영한 중국은 2021년 상반기 내에 전국 단위로 ETS를 확대할 계획으로, 2030년까지 누적 거래 규모가 1,000억 위안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47) 글로벌 탄소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sup>45)</sup> UNFCCC, About carbon pricing, https://unfccc.int/about-us/regional-collaboration-centres/the-ci-aca-initiative/about-carbon -pricing#eq-6(검색일: 2021. 4. 30).

<sup>46)</sup> The Japan News(2021. 3. 28), "Japan plans new trading market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https://the-japan-news.com/news/article/0007263054(검색일: 2021. 4. 27).



- 미국은 북동부 일부 지역의 발전부문(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과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발적으로 ETS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별로 상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탄소가격제 도입에 따른 탄소누출<sup>48)</sup>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국경세가 고려될 수 있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발표를 통해 특정 섹터(selected sectors)에서의 탄소누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제시함.
- [배경] EU는 WTO 및 그 외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수입품 가격에서 정확히 탄소 함량을 반영하도록 CBAM을 제안하겠다고 유럽 그린딜에서 밝힌 바 있음.49)
- [도입방식] 세 가지 정책수단(△탄소세 △탄소관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U ETS) 확대 적용)이 고려되고 있으며, EU집행위는 지난해 EU 역내외를 망라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CBAM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2020. 7. 22~10. 28).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대체로 동의하나 제도의 도입 방식에서는 이견이 확인되었음. 0~2점 점수를 기준으로 수입산에 세금 부과(1.3), 탄소세 부과(1.1), 수입산으로 한정한 별도 ETS에서 배출권 구입(1.05), EU-ETS를 수입품으로 확대 적용(0.98) 순으로 응답함.50)
- [쟁점] 개도국은 UN기후변화협약에 위배될 수 있으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 WTO 협정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임.
- 특히 UN기후변화협약 원칙이 기술된 3조에는 일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도국을 중심으로 CBAM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4. 평가 및 시사점

## 가. 기후정상회의 평가

- 이번 기후정상회의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리더십을 되찾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후변화 의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됨.
- 블룸버그는 '미국이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논의에 복귀하였고, 이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평가하였고,51) CNN도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잃어버린 국제적 리더십을

<sup>47)</sup> 证券时报(2021. 3. 1),「1000亿级大市场,交易规模翻4倍!全国碳市场交易将启动(附概念名单)」, https://data.stcn.com/djsj/202103/t202 10301 2868560.html(검색일: 2021. 4. 30).

<sup>48)</sup> 기업이 환경규제가 낮은 역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탄소배출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여, 역내 국가의 탄소배출 감축목표와 다른 결과를 초래.

<sup>49)</sup> European Commission(2019), Communica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 COM(2019)640 Final, p. 5.

<sup>50)</sup> European Commission(2021), Summary Report: Public consultation on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f. Ares(2021)70541, p. 4.

<sup>51)</sup> Bloomberg(2021. 4. 23), "Biden's Climate Summit Shows How Far U.S. Leadership Has to Go," https://www.bloomberg.com/news/art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보도함.52)

- 이번 회의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캐나다, 우리나라 등도 자발적으로 기존의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화석연료 대상 규제 강화,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며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함.
-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슈(무역, 인권, 외교 등)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고,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판단됨.
- 그러나 세계 1위의 배출국인 중국이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새롭게 제시한 정책목표(감축목표, 개도국 지원 규모)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므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기후변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시진핑 주석이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53) 원칙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며 중국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공약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환구시보에서도 선진국이 위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중국을 상대로 선진국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됨.54)
-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임을 재차 강조하였으나,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그동안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정권에 따라 전진과 후퇴를 거듭한 만큼 장기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음.55)
- 정권 교체에 따라 급변하는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및 탈퇴 (부시/공화당), 파리협정 가입(오바마/민주당) · 탈퇴(트럼프/공화당) · 재가입(바이든/민주당)을 들 수 있음.
- Climate Action Tracker는 미국의 2030년 감축목표가 2005년 대비 57~63%여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으나 회의에서 공개된 감축목표는 50~52%로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56) 개도국 지원 규모(57억 달러)도 환경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되기도 함.57)
- 가디언지는 이번 회의가 기후재원에 대한 돌파구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영국이 2021년 6월에 개최할 G7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이 개도국 지원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58)

icles/2021-04-22/biden-climate-summit-day-one-u-s-leadership-has-a-ways-to-go(검색일: 2021. 4. 26).

<sup>52)</sup> CNN(2021. 4. 23), "Biden hosts global climate change summit on Earth Day," https://edition.cnn.com/politics/live-news/biden-climate-change-summit-04-22-22/index.html?form=MY01SV&OCID=MY01SV(검색일: 2021. 4. 26).

<sup>53) &#</sup>x27;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은 파리협정의 원칙 중 하나로, 당사국이 각국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을 의미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책임이 큰 국가가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해석되기도 함.

<sup>54)</sup> 环球时报(2021. 4. 23),「社评:全球领导人谈气候,承诺贵践诺更贵」,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2paiHjMfAA(검색일: 2021. 4. 27).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리더십 경쟁을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함. South China Morning Post(2021. 4. 22), "What can China bring to the climate change summit table?"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30480/what-can-china-bring-climate-change-summit-table(검색일: 2021. 4. 27).

<sup>55)</sup> The New York Times(2021. 4. 19), "Amid Biden Climate Push, a Question Looms: Is America's Word Good?" https://www.nytimes.com/2021/04/19/climate/biden-climate-change.html(검색일: 2021. 4. 27).

<sup>56)</sup>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press/us-2030-target-should-be-at-least-57-63-percentage/(검색일: 2021. 4.27).

<sup>57)</sup> Bloomberg(2021. 4. 23), "Biden Disappoints Activists With \$5.7 Billion Climate Pledge for Poor Countri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4-22/biden-s-5-7-billion-climate-vow-to-developing-world-draws-ire(검색일: 2021. 4. 27).

<sup>58)</sup> The Guardian(2021. 4. 24), "Wealthy nations 'failing to help developing world tackle climate crisis',"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apr/24/wealthy-nations-failing-to-help-developing-world-tackle-climate-crisis(검색일: 2021. 4. 27).



#### 나.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 참여

-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모색해왔으나, 2050년 탄소중립 발표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및 환경 의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당사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한 파리협정 채택에도 불구하고, UN기후변화협약 이후 지속된 선진 국과 개도국 간 갈등 구조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서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차원의 다자협력이 절실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5월 30~31일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최초의 다자환경정상회의 '2021 P4G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요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Agenda 2030)'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식량/농업)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

#### 1) 실현가능하고 공정한 탄소중립 추진

- 파리협정하에서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억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축목표 상향을 추구할 것이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나 아직까지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방안은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 2020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탄소배출 상위 국가들이 연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향후 30~40년 내에 넷제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음.
-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장기전략(LEDS)에 명시하고 추진전략을 발표한바, 탄소중립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정치 리더십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가 장기 비전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감축 경로와 시나리오를 정교화하고, 탄소집약적 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법제화를 통해 향후 30여 년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 시나리오 및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 소수의 국가에서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고, EU는 2021년 상반기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하는 개정된 기후법을 발표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2050년 탄소중립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59)

<sup>59)</sup>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된 2050년 탄소중립 관련 법안으로는 기후위기대응법안(2106016),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2106733),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안(210267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안(2105226) 등이 있음.



- 정부는 기 발표한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선언한 대로 2030년 감축목표를 상항하고 2030년 이후의 중간 감축 경로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이행상황을 점 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군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사 회나 계층을 고려하는 공정 전환(just transition)을 도모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국내외적으로 탈석탄 기조가 강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바, 이들이 보다 청정한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금융 및 기술 혁신과 인력 재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
- 우리보다 먼저 탈탄소화를 추진해온 유럽,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에서는 저탄소 전환의 사회적 영향이나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전담기구를 조직하거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 해 관련 정책을 형성하고 있음.

#### 2) 기후재원 조성 및 민간 지원

-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GCF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며, 향후에도 기후재원 조성과 관련된 논의 협상 진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성될 공공재원의 상당 부문이 GCF를 통해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GCF는 지난 2014년 뉴욕 UN기후정상회의 및 리마 당사국총회 등을 통해 102억 달러의 초기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GCF의 첫 재원 보충기간(2020~23년) 재원으로 100억 달러를 조성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한국판 뉴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다자기금이나 국제기구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등의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국내 기업이 GCF 사업을 통해 해 외에 진출하도록 지원
- 기업 경영활동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정책 (K-Taxonomy,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별 의무화 등)이 원만히 시행·정착되도록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소기 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과 ESG 정보 공시 관련 국제표준 제정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가 기업에 지속가능한 투자 확대와 ESG 정보 공시를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ESG 평가기 준을 마련(2015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2018년)하였으며,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발,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별 의무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시범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60)
- 그러나 [표 6]과 같이 2021년 한 해에만 다수의 제도가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관계부처 및 기관은 민간 부문에서 과도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각각의 지침,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시범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업·기관과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가야 할 것임.

<sup>60)</sup> 금융위원회, 환경부(2021),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p. 4.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수출 대상국의 환경 규제나 RE100<sup>61)</sup>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협력업체 의 재생에너지 도입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선진국 기업의 ESG 대응이 10점이라면 우리 나라 대기업은 7점, 중소기업은 4점이라고 평가하며, 중소기업의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응답함.62)
- 재무제표 등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재무정보 작성 기준을 관리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예정대로 2021년 말 개최될 당사국총회(COP26) 전에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SB) 창설을 확정한다면, 차후 기업의 재무정보와 ESG 정보가 통합·보고되어 각각의 성과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바 있음.63)

추진전략	실천과제	적용 대상	추진 일정
민간금융 활성화	·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마련	· 친환경 제조업, 발전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개 분야 종사자	· 2021년 2/4분기 초안 마련 · 2021년 4/4분기 시범 적용
	·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 금융기관	· 2021년 1/4분기 초안 마련 · 2021년 2/4분기 시범 적용
	·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 금융기관 등	· 2021년 1/4~4/4분기
	· 「기후리스크 관리·감독 계획」 수립	· 금융기관	· 2021년 1/4분기 계획 수립 · 2021년 4/4분기 영향 분석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	· 환경정보 공시·공개 단계적 의무화 (총 3단계로 진행)	· 기업 등	· 2021년 1/4분기 계획 수립 · 2021년 4/4분기 법 개정
	·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 기관투자자	· 2021년 4/4분기
	· 환경 표준평기체계 마련	· 기업 등	· 2021년 2/4분기 모형 설계 · 2021년 4/4분기 시범 적용

녹색기업 및 녹색사업 참여자.

금융기관, 투자자 등

· 2021년 1/4~2/4분기

표 6.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내 민간금융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정비과제

자료: 금융위원회, 환경부(2021), 「2021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pp. 7~11.

#### 3) 탄소가격제 확산에 대비한 국제협력

•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탄소가격제가 국제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의 제도 도입 및 이행 과정에서 획득한 역량과 노하우는 경쟁력이 있음.
- 선진국의 대규모 개도국 지원과 차별화되는 우리나라의 장점으로 단순한 하드웨어적 요소가 아닌, 에너지 환경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확보한 시스템(자료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 표준화 등)을 개도국과 공유하면서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sup>61)</sup>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공약으로 나이키, 애플, 시티그룹 등 전 세계 300개 이상의 다양한 기업(기관)이 참여 중임. RE100 홈페이지,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검색일: 2021. 4. 28).

<sup>62)</sup>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2021. 2. 25), 「글로벌 ESG 경영·투자 확산 대비 한국 기업 대응현황 및 주력산업 전망」, p. 3.

<sup>63)</sup> Barker, Eccles, and Serafeim(2020), "The Future of ESG Is ··· Accounting?" Harbard Business Review, https://hbr.org/2020/12/the-future-of-esg-is-accounting(검색일: 2021. 4. 29) 참고.



- 탄소가격제에 대한 다자 차원의 이니셔티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UN기후변화사무국에서 주도하는 기후지역협력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PMR(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U에서 2021년 6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EU는 2021년 6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이행방안 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CBAM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 국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EU 차원 및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 와 입장이 비슷한 제3국 등과의 협력방안 모색도 필요함.

#### 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 한국과 미국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5월 21일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인프라, 청정에너지 구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미국과의 협력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31일 국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도 미국의 국제기후금융계획을 발표하는 등 향후 확대될 기후 관련 사업에서 양국 기업간 협력을 모색
-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양국의 정치·경제적 관심이 높은 아시아 지역(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재생에너지 발전, LNG 인프라 구축,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되었던 GCF 지원을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관련 사업에 미국의 주요 민간기금이 참여하는 협력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GCF 초기재원으로 30억 달러를 공약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20억 달러를 미이행한바,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미국에 GCF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통해 공 공재원에서의 미국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음.
-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금융 협력을 통해 미국의 대규모 연기금 등 공공 및 민간 자금이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 **KIEP**